

서른여덟번째 정책제안

VOICE OF THE KAST
한림원의 목소리

통일 후
식량안보 미리 대비해야

VOICE OF THE KAST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통일 후 식량안보 미리 대비해야

통일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숙원과제이다. 그 숙원과제를 잘 풀어 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는 순간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한 통일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가치관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으로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적 차원에서는 모두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참여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통일 준비를 되돌아보면 통일 비용에 관한 추산이나 통일 이후의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수급에 관한 예측이나 식량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한반도 분단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의 식량 상황 및 국민 영양 상태는 매우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남한의 경우를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2·3차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경제발전을 하다 보니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부족한 식량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이제 곡물자급률은 2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는 식량안보 취약국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우방국의 원조중단, 자국의 폐쇄된 정치 문화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파탄을 겪고 있다. 게다가 다년간의 농정실책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남북 모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 식량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정부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아래의 식량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상시 식량 비축제도 법제화

통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량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상시 식량 비축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비축미 120만 톤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통일 특수를 대비한 남한의 식품산업 시설의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통일 초기의 식품공급을 준비해야 한다.

■ 식량수요 예측에 따른 식량증산 계획 수립

통일 후의 식량수요를 예측하여 식량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는 동시에 쌀과 식용 콩의 증산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곡물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수요창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료곡물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조사료 자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럽형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 농수산업특별지구와 식품산업특별지구 개설·운영

식량 확보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수산업특별지구와 식품산업특별지구 개설을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농수산업 특별지구를 통해 남한의 농업 및 어업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고 북한의 식량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통일 이후의 급격한 식량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삼각농업협력방식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식량·영양 최적화 모델 연구

통일을 한민족의 식량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과소비·과영양으로 치달고 있는 남한 주민의 비경제적 식습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만성적 영양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인 식량·영양 최적화 모델의 연구와 실현이 시급하다.

■ 식량농업정책의 전환

통일 후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한에서 시행되는 식량농업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쌀이 남아돈다고 생산을 억제하는 현재의 식량농업정책보다는 쌀의 수요를 창출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비축해두는 증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농업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때 농업을 살리고 동시에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